독일의 가족기업과 가업승계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2022. 4. 29.

High-potential Enterprises Research Institute
중견기업연구원

Contents

1. 문제의 제기

2. 독일의 가족기업

3. 독일 가족기업의 승계

4. 독일의 가업승계 관련 정책 및 법제도

5.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문제의 제기

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한 중소·중견기업 승계 문제

- ☑ 기업의 영속성 유지, 암묵지와 기술 계승 → 기업 경쟁력 향상
- ☑ 양질의 일자리 보존, 고용 창출, 투자 확대 → 경제 활력 제고
- ☑ 명문장수기업 탄생을 촉진하고 건실한 중소·중견기업 층을 두텁게 함
  -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 청년실업 문제, 사회 양극화 현상 등 완화에 기여
- ☑ 승계가 원활하지 못해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
  -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없어짐
  -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경영비법, 생산설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자산도 死藏
- ☑ 경쟁국들은 가업승계를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중시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적극화

1. 문제의 제기

중소·중견기업의 승계와 관련한 주요 이슈

- ☑ 창업세대의 고령화 진전 → 승계 대상 기업의 급격한 증가
- ☑ 가업승계에 관한 정책당국의 인식과 실효성 있는 정책 부재
- ☑ 과다한 상속세 부담, 역량 있는 후계자 부족 등으로 가업의 승계를 기피하는 기업이 증가
- ☑ 승계를 앞둔 기업들의 투자 활동 및 기업가정신 약화 → 국민경제 활력 저하
- ☑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팽배

1. 문제의 제기

가업의 승계가 "부의 대물림"인가?

☑ '기업 재산'의 상속과 '일반 재산'의 상속의 차이

- 생산활동에 공여되는 기업 재산 :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부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

☑ 가업승계가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 국민경제 : 양질의 일자리 유지, 고용창출, 투자 확대, 재정수입 증대, 기술 축적과 원천기술 확보에 기여
- 기업 : 경영성과 향상, 누적우위(cumulated advantage) 창출, 명문 장수기업으로 가는 관문, 기업소유 가족 번영
- 근로자 : 일자리 보존, 복지 향상, 직업의 안정성 증대

☑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富)의 대물림'이 아닌

'고용과 기술의 대물림' '책임과 기업가정신의 대물림' '제2의 창업'

* "부의 대물림 차단" "과세 형평성" 등을 강조하다가 기업의 영속성 유지, 건전한 기업가정신 발휘와 국가 경쟁력 저해 우려

2. 독일의 가족기업

가족기업 개념

☑ (일반적 정의)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기업주 및 그의 가족에 속한 기업

- '기업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 그룹이 의결권 또는 통제권을 갖는 자본의 대부분을 보유하면서, 당해 기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가족 구성원 이외의 전문경영인들과 공동으로 경영하는 기업'

☑ (구체적 요건)

- 2명 이내의 자연인 또는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및 지분을 최소 50% 이상 보유하면서
- 이들 의결권 있는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한 자연인이 기업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 IfM Bonn -

2. 독일의 가족기업

국민경제상 비중

☑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가족기업 수 비중 : 90 ~ 95% (IfM Bonn, 각 연도 관련 통계)

☑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

- 전체 기업의 과세대상 매출액 중 가족기업 매출액 비중 : 41.1%
- 사회보험의무가 있는 전체 근로자의 61.2%를 가족기업에서 고용

기업 유형별, 규모별 근로자 수 현황(단위: 매출액: 백만유로, 근로자수: 명)

	기업유형/규모	~ 1백만	1-5	5-10	10-50	50백만 초과	전 체
전 산 업	여성기업	1,536,305	447,932	138,271	192,399	80,932	2,396,838
	남성기업	5,923,331	2,795,228	1,090,954	1,854,826	800,768	12,465,108
	가족기업 합계	**7,459,636**	**3,243,160**	**1,229,225**	**2,047,225**	**881,700**	**14,860,946**
	비가족기업	135,984	796,741	509,212	1,674,466	6,316,343	9,432,746
	전체기업 수	**7,595,620**	**4,039,901**	**1,738,437**	**3,721,691**	**7,198,043**	**24,293,692**

(IfM Bonn, Volkswirtschaftliche Bedeutung von Familien- und Frauenunternehmen, Sep. 2010, 2006년 매출세 납부의무기업 기준)

2. 독일의 가족기업

경영 특성 (독일식 경영모델 선호)

독일식 경영모델

• 전략측면 : 틈새시장에서 글로벌 마켓리더를 지향

– 크고 가격경쟁이 치열한 'Volume Markets'과는 거리를 두고 가격 경쟁이 아닌 특화된 고기술 제품 및 서비스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최상의 품질로 제공

– 자체 영업망을 통해서 고객과의 친밀성을 유지하고, 핵심역량은 결코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일반적

• 지배구조 측면 : 장기적인 관점을 중시한 경영활동을 전개

– 여러 세대를 거쳐 장기간 기업을 소유·경영하여 온 가문의 대부분은 단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금융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가족이 보유한 자원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함

–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 및 충성도를 유지하면서 장기 안정적인 관계를 중시함

– 가족 구성원 가운데 충분한 자격을 갖춘 후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경영인을 적극 영입하여 승계 문제 해결

• 운용의 효율성 측면 : '핵심 프로세스에서 세계 최고 수준' 유지

– TQM과 작업현장의 끊임없는 개선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

– 기업 내부에 높은 수준의 기술개발 능력 및 핵심역량 보유하고 자체적인 기술개발 활동을 전개하면서 필요시 공급자,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을 통해 필요기술을 습득 및 이전하는데도 매우 적극적

• 기업문화 측면 : 노사협력으로 높은 성과 창출, 성과를 공유("Sowing and Harvesting together")

– 각 기업마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잘 훈련된 전문인력을 확보

- 생산현장의 중간간부들과 사내 R&D 전문인력 간의 원활한 소통 및 조율을 통한 혁신활동을 전개

– 'Two Way Loyalty'

* 자료 : Overview of selected SME Policy Areas in Germany, 2012.7. IfM Bonn.

2. 독일의 가족기업

주요 과제 : 경영자 세대교체 문제

☑ 고령화에 따른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의 승계 및 양도와 매각 현상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

☑ 해당 기업을 이어 받아 경영하거나 매입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젊은 세대의 부족 현상 심화

- 적합한 후계자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기업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창업을 하는 기업의 수에 비해서 양도하려는 기업의 수가 약 3배에 달함

☑ 기업의 성공적인 승계 및 이전 문제는 독일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과제로 부상

* KfW 금융그룹 자료를 보면 독일 중소기업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대교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승계 및 양도와 매각이 큰 폭으로 증가 (**Arne Leifels, KfW Research Fokus Volkswirtschaft, Nr. 132, Juli 2016)**

→ 'KfW-Mittelstandspanel 2015'을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약 17%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유주들은 2018년까지 자신의 기업을 후계자에게 승계하거나 양도 및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음 (해당 기업 수 62만 개, 종사자 400만 명)

·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와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로 역량 있는 후계자 부족현상 발생

· 기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인수 창업)도 감소하는 추세

3. 독일 가족기업의 승계

가업승계 동향 ①

■ 가족기업 승계 관련 최근 통계 (IfM Bonn)

☑ **2022-'26년 기간 중 승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수 : 19만 사(년 평균 3만8천개 기업)**

☑ **2018-22년 기간 중의 승계 예상 기업 수 : 15만개 사 (년 평균 3만개 기업)**

- 이들 기업의 승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240만개 일자리 유지·보존
  승계 이후 기업의 성장·발전 과정에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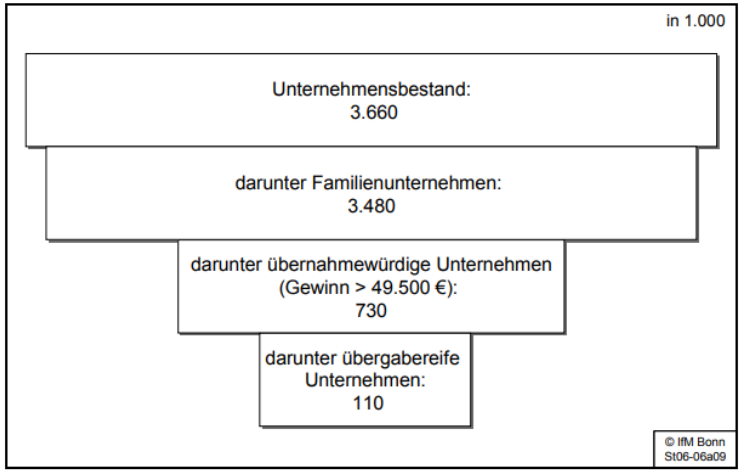
- 승계 예상 기업의 53% : 가족 내 승계 (familieninterne Nachfolge)
  · 18% : 기업 내 승계 (unternehmensinterne Nachfolge)
  · 29% : 기업 외 승계 (unternehmensexrerne Nachfolge)

Dezember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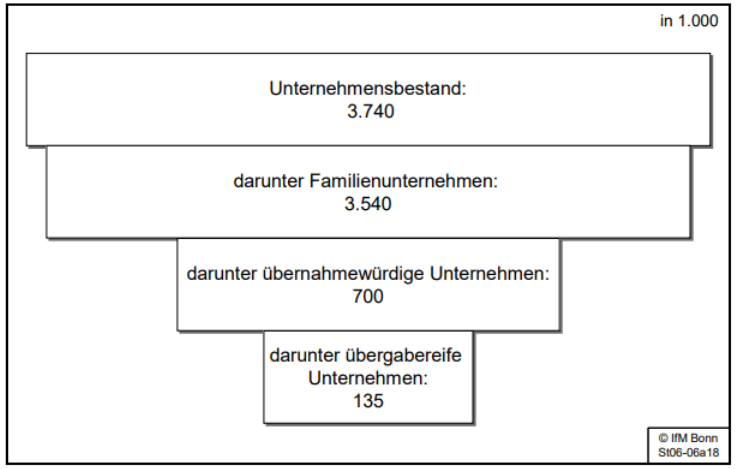
3. 독일 가족기업의 승계

가업승계 동향 ② : 승계 기업의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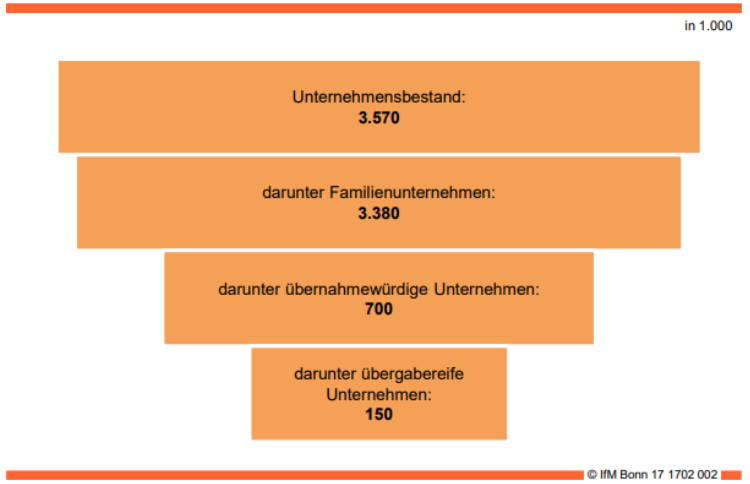
201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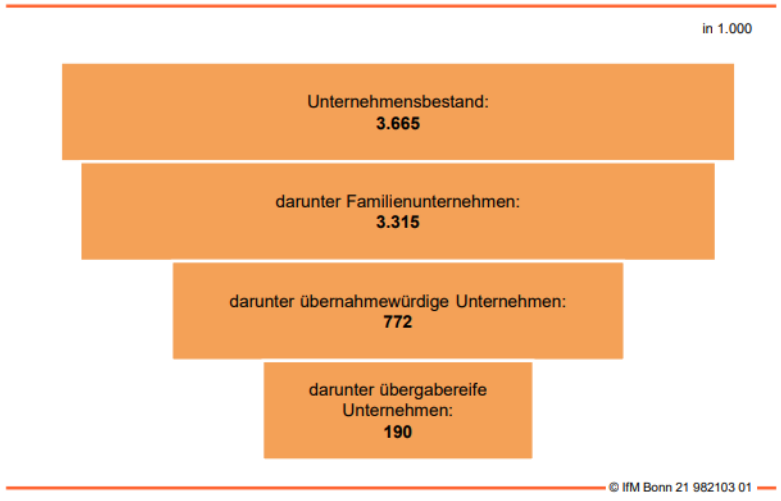
2014~2018



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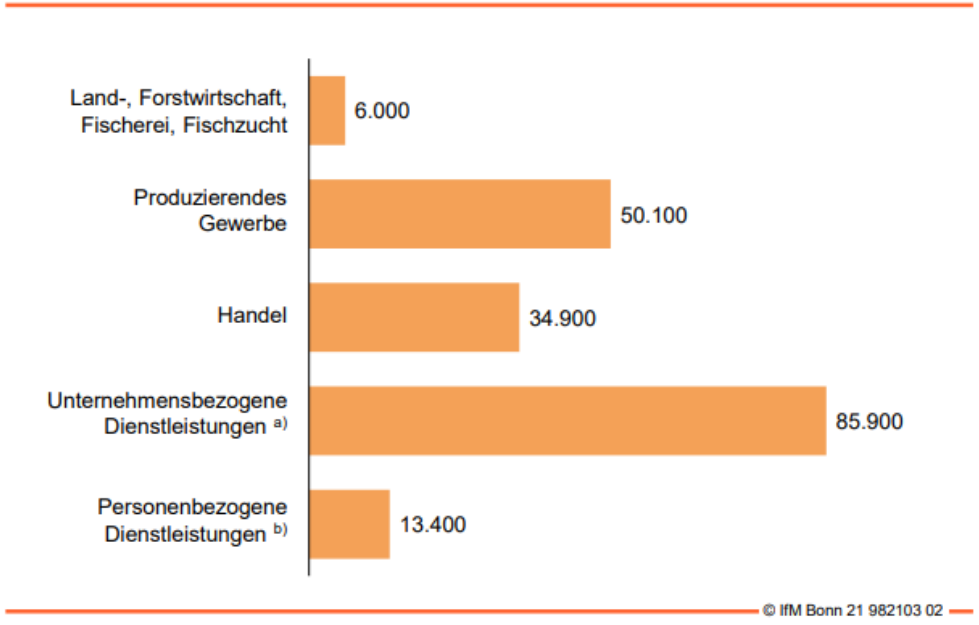
2022~2026



3. 독일 가족기업의 승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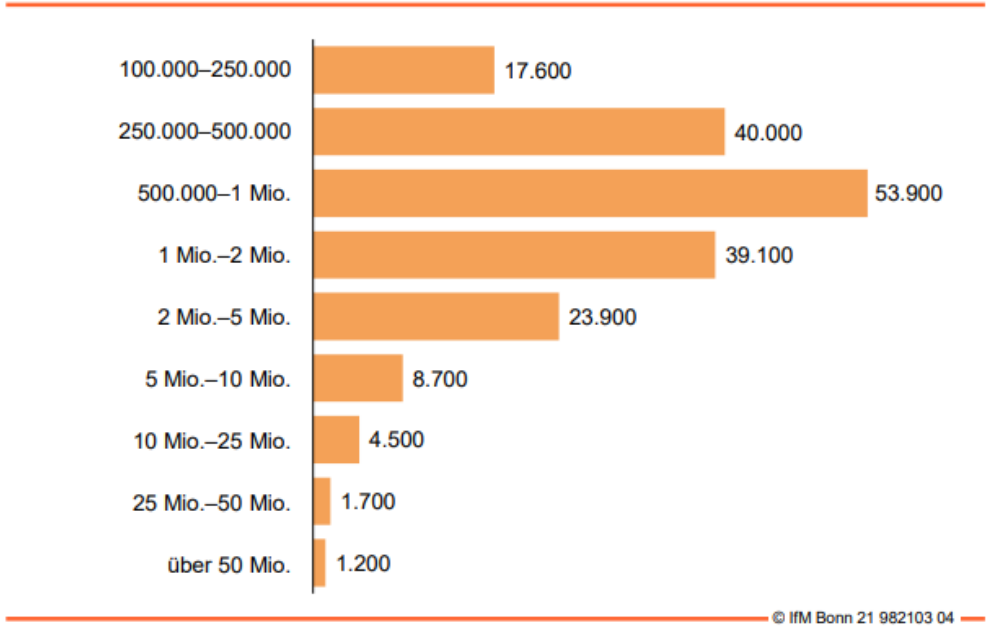
승계 예상 기업 분포 : 산업별, 기업규모별

승계 예상 기업 (산업별)



승계 예상 기업 (매출액 규모별)

단위 : 유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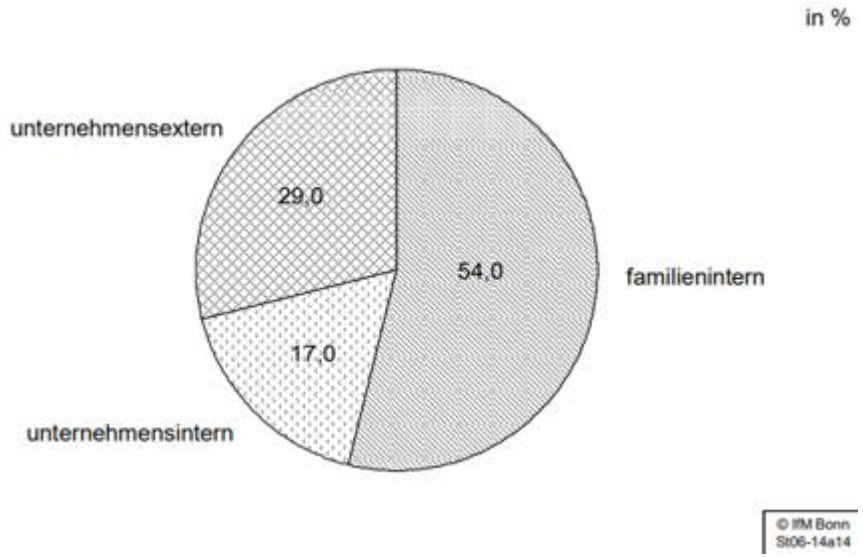


3. 독일 가족기업의 승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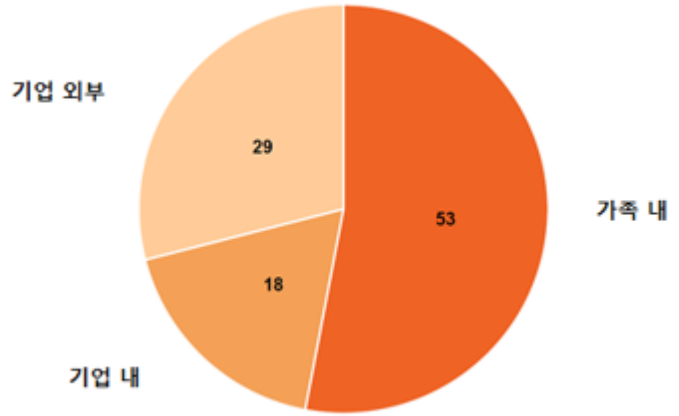
가업승계 동향 ③ : 가족 내 승계를 선호

<계획하고 있는 승계 방식, %>

(2014~2018)



(2022~2026)



3. 독일 가족기업의 승계

가업승계 관련 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

☑ 가족기업 :

☑ 승계에 적합한 기업 (uebernahmewuerdige Unternehmen) :

- 연간 영업수익이 61,300 유로 이상인 개인기업 또는 인적회사
- 손실을 시현하지 않은 물적회사 (자본 회사)
-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물적회사 중에서
- 연간 매출액이 10만 유로 이상인 기업

☑ 승계가 무르익은 기업 또는 승계 예상 기업(uebergabereife Unternehmen) :

- 승계에 적합한 기업 가운데 향후 5년 이내에 기업 소유주가 개인적인 사유(나이, 질병, 사망 등)로 기업을 승계, 양도하고 물러나게 될 기업

4. 독일의 가업승계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인식)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 ☑ 국가 경쟁력 차원의 과제로 보고 기업의 승계를 적극 지원 : 다양한 정책 및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 ☑ 국민들도 승계를 통한 가업의 영속성 유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보존을 응원하고 소중하게 생각

EU 중소기업법(The Small Business Act.)**의 관련 규정**

" 성공적인 사업의 승계 및 양도는
신규 창업기업이 만들어 내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유지·보존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기업의 승계 및 양도에 대하여는
창업과 동일한 수준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요구된다.
특히 조세 문제로 인하여 기업의 승계 및 양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4. 독일의 가업승계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인식)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 **'가업승계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업의 사업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감면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을 보장하고 일자리 보존이라는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 **승계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은** 지대한 차별취급을 초래하지만 **기업의 존속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공공복리를 통해서 정당화**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본법 제3조 제1항(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높은 상속세 납부 부담을 지는 경우에는 **대기업도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투자여력을 상실하거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기업을 매각하거나 해체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위험성이 초래하게 될 공공복리의 훼손 부담은 크기 때문에, **대기업에게도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헌법상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업재산에 대한 상속세감면이 아무런 세감면 혜택 필요성 심사도 거치지 않고 대기업에까지 (무제한적으로) 제공된다면 헌법에 위반되고 ... 사업재산의 50%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관리자산에 대해서 상속세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위헌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 법률조항들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2014.12.17.) 요지)

4. 독일의 가업승계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조세제도)

상속 및 증여 세율 우대 적용

☑ **배우자 및 직계 비속에 대한 가업의 상속·증여 : 최고세율 30% (다른 과세등급의 최고세율은 43% 또는 50%)**

- 후손에게 가업을 승계함으로써 가문의 유산을 창조하고 경쟁력 있는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과세 표준액 (단위 : 유로)	과세등급별 세율 (단위 : %)			
	상속인 그룹 I (배우자+직계비속)	그룹 II		그룹 III
		과거 (~2009)	현재 (2010~)	
- 75,000	7	30	15	30
- 300,000	11		20	
- 600,000	15		25	
- 6백만	19		30	
- 13백만	23	50	35	50
- 26백만	27		40	
26백만 초과 (350억 원)	30		43	

4. 독일의 가업승계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조세제도)

기업의 사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

1) 사업 재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

☑ 사업 재산 가운데 26백만 유로(약 350억 원) 한도 내에서
"가업상속세 감면 모델"에 따라 상속세를 차별적으로 감면

구 분	내 용
일반감면 모델	**상속재산의 85% 감면 혜택** (5년간 기업 유지, 급여지급 총액 400% 이상)
선택감면 모델	**상속재산의 100% 감면 혜택** (7년간 기업 유지, 급여지급 총액 700% 이상)

*** 일반감면 모델을 선택한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업재산(15%) 가운데 최대 15만 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공제

4. 독일의 가업승계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조세제도)

대규모 사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

☑ 상속 대상 사업재산 규모가 26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부과

☑ 상속인이 26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사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점감적 세감면' 혜택을 신청하거나, '세감면 필요성 심사'를 신청

1) 점감적(漸減的) 세감면 모델

- 26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시작하여 최고 90백만 유로(약 1,200억 원)에 이르기까지 매 75만 유로마다 1%p씩 감면 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구조로 설계

* 90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세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음

4. 독일의 가업승계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조세제도)

대규모 사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

26백만 유로 초과 사업재산 규모별 상속세 감면 비율

사업재산 규모 (단위 : 백만 유로)	상속세 감면 비율 (단위 : %)	
	상속세 '일반감면'	상속세 '선택감면'
< 26.00	**85**	**100**
26.0 – 36.49	85 - 72	100 - 87
36.5 – 46.99	72 - 58	86 - 73
47.0 – 57.49	**57 - 44**	72 - 59
57.5 – 67.99	43 - 30	**58 - 45**
68.0 – 77.49	29 - 17	44 - 32
77.5 – 90.0	16 - 0	31 - 15
> 90.00	0	0

4. 독일의 가업승계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조세제도)

대규모 사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감면

2) 세감면 필요성 심사

- 상속인이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50%를 투입해도
  기업의 사업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를
  개인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상속세액에 대한 납부가 면제

- '7년간 급여지급 총액 700% 유지' 조건 적용

4. 독일의 가업승계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조세제도)

“사전 특별공제”를 통한 추가적인 혜택 제공

☑ **“사전 특별공제" : 사업재산의 최고 30%까지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인적 요소가 강한 가족중심 기업으로서 회사 설립계약이나 정관에
  - 이익배당 및 자금인출 제한
  - 재산처분 제한
  - 퇴직보상금 제한 등을 중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업의 상속 사업재산 중에서 최고 30%에 달하는 금액을 ‘사전 특별공제’ 형식으로 상속세 부과에서 제외”
(개정 상속세법 제13a조 제9항)

4. 독일의 가업승계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법제도적 인프라)

가족기업의 안정 승계와 장수기업화를 촉진하는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 **가족기업의 경영 및 승계 과정에서 경영권 확보와 안정된 지배구조 구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인프라가 효과적으로 구축**

- 다양한 형태의 재단 활성화 : 공익재단, 가족재단, 이중재단, 신탁재단
  * 공익재단 출연 주식에 대한 비과세 한도 : 20%
  * 다수의 성공한 기업인들이 기업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과 가업의 영속성 유지 수단으로 활용

- 신탁제도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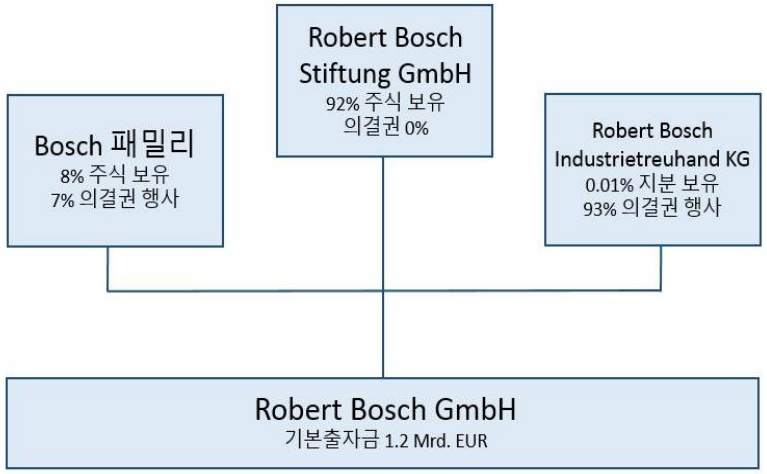
- 주식의 의결권과 수익권 분리

- 가족경영에 유리한 유한회사 제도 활성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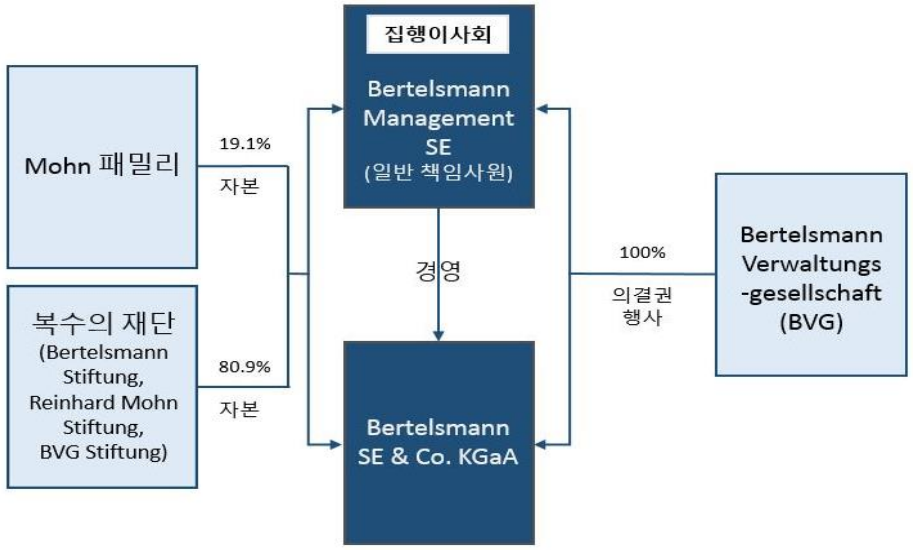
4. 독일의 가업승계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법제도적 인프라)

재단 설립, 신탁, 회사법 등을 활용한 기업 승계 및 지배구조 구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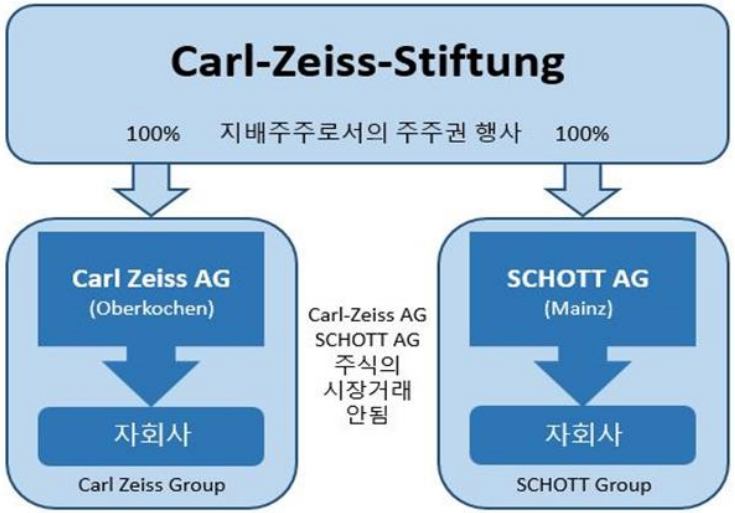
① 보쉬(Robert Bosch GmbH)



② 베텔스만(Bertelsmann SE & Co. KGaA)



③ 칼 자이츠(Carl Zeiss AG)



4. 독일의 가업승계 관련 정책 및 법제도 (후계자 부족에 대한 대응)

후계자가 없거나 가업을 계속 영위할 계획이 없는 경우의 기업승계

☑ **창업에 준하는 수준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의 승계 및 양도를 지원**

- Nexxt Change 프로그램 :
  전국규모의 독일 최대 온라인 기업 거래소
  (정부, KfW, 지역 은행, 기업인 단체 등 참여)

- 기업을 양도하려는 고령의 기업주와, 기존 업체를 인수해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젊은 기업인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승계 및 창업을 촉진 + 기업에 축적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일자리 유지에 기여

- 제공되는 정책 수단 : 금융, 조세, 정보제공, 컨설팅 서비스 등

- 매년 1,000여 개 기업의 승계가 이 거래소를 통해 성사

4. 독일의 가업승계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정책의 효과성)

승계 유형별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도

상속 방식을 활용한 승계

(단위 : 독일 1백만 유로, 한국 10억 원)

구분	연도	과세		과세미달		합계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당 공제액
독일	2014	7,059	3,263	3,082	3,176	10,141	6,439	0.6
	2015	7,789	3,481	3,296	1,272	11,085	4,753	0.4
	2016	8,207	3,169	3,678	2,039	11,885	5,208	0.4
	2017	7,410	2,448	3,337	4,433	10,747	6,881	0.6
	평균	**7,616**	**3,090**	**3,348**	**2,730**	**10,965**	**5,820**	**0.5**
한국	2014	63	94	5	4	68	98	1.4
	2015	57	164	10	6	67	170	2.5
	2016	60	295	16	22	76	317	4.2
	2017	75	189	16	32	91	221	2.4
	평균	**64**	**186**	**12**	**16**	**76**	**202**	**2.6**

자료: 독일, statistisches Bundesamt, Finanzen und Steuern, Erbschaft-und Schenkungsteuer, 각 연도;
한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이성봉 자료 재인용

4. 독일의 가업승계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정책의 효과성)

승계 유형별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도

증여 방식을 활용한 승계

(단위 : 독일 1백만 유로, 한국 10억 원)

구분	연도	과세		과세미달		합계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당 공제액
독일	2014	2,367	33,864	8,487	25,722	10,854	59,586	5.5
	2015	2,552	24,584	10,369	27,444	12,921	52,028	4.0
	2016	2,429	18,255	10,733	34,775	13,162	53,030	4.0
	2017	1,850	17,939	8,722	24,123	10,572	42,062	4.0
	평균	**2,300**	**23,661**	**9,578**	**28,016**	**11,877**	**51,677**	**4.4**
한국	2014	73	127	33	12	106	139	1.3
	2015	52	101	24	6	76	107	1.4
	2016	96	193	34	8	130	201	1.5
	2017	116	246	57	17	173	263	1.5
	평균	**84**	**167**	**37**	**11**	**121**	**178**	**1.4**

자료 : 독일, statistisches Bundesamt, Finanzen und Steuern, Erbschaft-und Schenkungsteuer, 각 연도;
한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이성봉 자료 재인용

<참고> 일본의 사례

☑ 가업승계를 획기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 2017년 사업승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 **'특례사업승계세제'** 창설 (2018년)

<특례사업승계세제 도입 목적>

- 경영자 고령화, 후계자 부족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산업을 다음세대에 확실하게 이전하고, 사업승계를 계기로 후계자가 경영혁신을 적극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

- 기존 사업승계세제(일반 사업승계세제) 문제점 보완을 통한 사업승계 활성화 도모

*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방치될 경우 중소기업 폐업이 급증하여
향후 10년간 650만개의 일자리와 약 22조 엔에 달하는 GDP가 증발할 것으로 예상 (일본 중소기업청 자료)

<참고> 일본의 사례

☑ '특례사업 승계세제'의 주요 내용

- 후계자가 '특례인정 승계회사'의 대표권을 갖고 있던 자(특례 증여자, 특례 피상속인)로부터 증여,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해당 특례인정 승계회사의 비상장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과 관련한 증여세 및 상속세 전액에 대하여 특례증여자 또는 특례후계자 사망일 까지 납세를 유예함으로써, 승계시점에서의 세금부담을 완전 면제

- 친족 이외의 자를 포함 복수의 주주와 대표자인 후계자(최대 3인)에 대한 승계도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한 승계방법 선택 가능
- 승계 후 의무고용 요건(5년간 평균 8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납세유예 계속 가능

- 후계자가 승계 기업을 폐업 또는 매각하는 경우 폐업 및 매각 당시 평가액을 기초로 납세액을 재계산하고, 승계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납세액과의 차액을 감면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장래의 불안을 감소

- 2023. 3. 말까지 승계계획을 제출하고 2028. 12. 말까지 실제로 승계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업실정에 적합한 승계 활동 지원

- 비상장 중소기업 대상, 10년간 한시 적용

<납세유예 지속 요건>

후계자가 세금신고 기한 이후 5년간 대표자로 재직, 납세유예 대상 주식 계속 보유

<참고> 일본의 사례

일본의 사업승계 관련 세제

		원칙(일반)	특례 적용
대상 주식		총주주 등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전 주식
유예 대상 평가액	증여세	100%	100%
	상속세	80%	100%
후계자		후계경영자 1명만	후계경영자 3명까지 (소유주 10% 이상의 요건)
증여하는 자		선대경영자만 ※ 개정 후 : 복수 주주 가능	선대경영자를 포함한 복수 승계자
고용 요건		5년 평균 80% 유지	실질 철폐
경영 승계 기간 후 감면 요건		민사재생(民事再生), 會社更生)시 그 시점의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재계산 하여, 초과분의 유예 세액을 면제	좌기의 경영 환경의 변화를 나타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 합병, 주식 교환 등에 의한 소멸 등 해산의 경우를 추가
상속 시 정산과세		추정 상속인 등 후계자만	추정 상속인 등 이외에도 적용 가능
특례승계 계획의 제출 및 제출 기간		불필요	필요 2018년 4월 1일부터 5년간
선대 경영자로부터의 증여 기간		제한 없음	2018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개선
- ✍ 승계와 관련한 조세부담 완화
  -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사전 및 사후관리 요건 현실화, 적용대상 확대
  - 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상속세율 우대 (일반 상속재산과 기업의 사업용 재산과의 상속세율 차별화)
- ✍ 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가업승계 활동 촉진
- ✍ 승계 대상 기업의 경영권 확보와 안정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뒷받침 할 법·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
  - 차등의결권 등 종류주식 도입, 재단 관련 법제와 신탁제도 선진화 등
- ✍ 후계자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감사합니다.

High-potential Enterprises Research Institute
중견기업연구원